

미래전략실 주간브리핑 (2017.6.12)

정부,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로 과기정책 지원에 힘 실어

-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,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차관급 '과학기술혁신본부'를 신설하기로 합의
- 기존 1차관 산하의 과학기술정책본부(과학기술정책국, 연구개발투자심의국) 기능에 R&D 예산 관련 기능이 더해진 형태



(행정자치부 제공)

- 기존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던 R&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, 출연연 운영비·인건비 조정 권한 등을 과기혁신본부로 이관하고, 기획재정부의 R&D 지출한도 설정에도 참여
- 기존 '국가과학기술심의회'와 '과학기술전략회의'를 폐지하고 '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'로 과학기술 분야 정책 조정과 자문 역할 일원화 [\(관련 기사\)](#)

시사점

- 기존 기재부 R&D 예산 권한의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 가능성 및 출연연 거버넌스 재조정 대두 전망
- 향후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 전담 부처 신설 예상도 존재 [\(관련 기사\)](#)

카타르의 고립과 가스공급 불안정, 러시아와 북극 협력으로 이어지나

- 6월 5일, 사우디아라비아, 바레인, 이집트, 아랍에미리트(UAE)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8개국은 카타르가 이란의 적대 행위를 지원하고,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단교를 선언하고, 항공/해상/육로 통행을 금지
- 단교를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니파 아랍권 국가들은 카타르에 시아파 맹주 국가인 이란과 모든 관계를 끊고 카타르 정부 소유 뉴스 채널 알자지라 보도 통제, 타국 내정 간섭 금지 등을 요구할 계획
- 카타르는 이에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외교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
- 카타르는 세계 1위 천연가스(LNG) 수출국으로 전 세계 LNG 수출량의 30%를 담당
- 우리나라 역시 전체 LNG 수입물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인 약 37%를 카타르에서 들어오는 상황으로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안정적인 LNG 수입 차질 전망 [\(관련 기사\)](#)

시사점

- 현 정부 역시 러시아 가스관사업 추진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카타르 사태를 계기로 한-러 북극 에너지 협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 [\(관련 기사\)](#)

북아내리는 북극, 정치 지형도 달라진다

- 블룸버그(Bloomberg)는 북극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 움직임을 중심으로 북극의 정치·안보 분석
- 북극이사회 체계, 배타적경제수역, 인구 추이 등 정치적 환경 분석
-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확대하는데 비해, 미국은 상대적으로 북극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고 지적
- 특히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군사 기지 확충 등 북극 안보 주도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, 북극의 경제적 중요성 증대로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 [\(관련 기사\)](#)